

2021년도 제11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21년 6월 10일(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고 승 범 위 원
임 지 원 위 원
조 윤 제 위 원
서 영 경 위 원
주 상 영 위 원
이 승 헌 위 원(부총재)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장 호 현	감사	박 종 석	부총재보
	이 환 석	부총재보	배 준 석	부총재보
	민 좌 홍	부총재보	양 석 준	외자운용원장
	김 웅	조사국장	이 정 욱	금융안정국장
	이 상 형	통화정책국장	김 인 구	금융시장국장
	김 현 기	국제국장	신 운	경제연구원장
	박 영 출	공보관	한 승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성 광 진	의사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20호 -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6월)(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96조에 의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6월)를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협의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위원 간 사전 협의를 통해 보고서의 전반적인 구성체계는 지난 3월 보고서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실물경제 부문의 기술을 강화하는 한편 통화정책 수행 여건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근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과 그 주요 특징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하였음. 또한 ‘향후 정책운영 방향’에서 ‘기준금리 운용’ 기술시 커뮤니케이션의 일관성을 위해 특정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추가 논의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이 매우 중요해진 시점인 만큼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의 배경을 보다 명확히 밝히기로 하였음.

다음으로 6월 3일과 6월 7일 두 차례의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참고 1-1. 코로나19 이후 산업별 회복세 평가’가 통계청의 산업 활동동향 통계에 기반하고 있어 그 분석결과가 GDP 통계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유의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비대면 서비스업의 경우 온라인 활동이 활성화된 산업을 대상으로 서술하는 등 분류를 보다 엄밀하게 하여 최근 상황을 서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참고 1-3. 최근의 장기금리 상승 요인 및 영향 분석’에서 과거 장기금리 상승기에 잠재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갔다는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GDP갭 추이 등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참고 1-4. 최근 회사채시장 상황 평가’에서 회사채 미매각률 추이가 보다 잘 드러나도록 시계열을 연장하고, 2020년 12월 중 미매각률이 급등한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향후 정책운영 방향’의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 부분을 기술할 때 경제주체들과의 소통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다른 일부 위원은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부분에서, 한시 운용 중인 금융시장 지원 조치의 예시로 회사채·CP 매입기구를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한 일부 위원은 ‘참고 III-1. 최근의 금융불균형 상황에 대한 평가’의 분석이 전반적인 금융불균형이라기보다는 가계대출과 주택가격에 초점을 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편, ‘향후 정책운영 방향’ 중 ‘기준금리 운용’ 부분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내용을 보완하여 ‘당분간’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일부 위원은 금통위의 의견을 시장과 정확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시장기대를 견인하고 중장기적으로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또한 통화정책방향 회의결과는 결정문뿐 아니라 총재 기자회견담회 모두발언, Q&A 등을 통해서도 전달되는 만큼 이러한 메시지를 모두 종합하여 기술하는 것이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다른 일부 위원들은 ‘기준금리 운용’ 부분을 직전 통화정책방향 결정문과 다르게 수록한 선례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내용을 보완하여 기술하는 것이 금통위의 의견을 보다 적절하게 전달하는 방향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이에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기준금리 운용’ 부분은 만장일치로 결정된 금통위의 결정문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면서, 따라서 ‘당분간’이라는 문구는 추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러한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위원들은 다수 의견에 따라 ‘당분간’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음.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향후 정책운영 방향’에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가 ‘당분간 현재의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로 바뀌고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이례적으로 완화하였던 통화정책기조의 정상화’라는 문구가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이는 지난 5월 27일 금통위가 의결한 통화정책방향 서술과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서술을 이번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그대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 비록 우리 경제가 그간의 다각적인 정책대응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상태는 여전히 회복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며,

인플레이션의 경우 하방압력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당행이 중기적 시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하였음. 또한 코로나19 피해업종 및 취약계층의 활동이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고, 그간의 성장 손실을 만회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따라서 회복과 확장의 탄력을 선제적으로 제어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만큼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논의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다만, 주상영 위원은 ‘향후 정책운영 방향’에서 ‘당분간’이라는 표현과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이례적으로 완화하였던 통화정책기조의 정상화’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6월)」(안) (생략)